

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7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5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뒤늦게 교수가 되어 하루 종일 판례를 읽으며 지내기도 한다. 지금은 익숙해졌지만 초창기에는 판결이유가 ‘예쁘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읽었다. 특별히 의미가 있는 판례를 만나면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에 압축하여 정리하느라 애를 먹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 ‘재판거래’ 의혹은 ‘사법농단’ 의혹 때보다 훨씬 충격적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던 김만배 씨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 전후로 당시 권순일 대법관을 8차례나 찾아갔다고 하고, 권 대법관은 무죄판결 후 2개월 만에 퇴직하고 곧바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월 1500만원씩을 받았으며, 소위 ‘50억 클럽’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의 특혜를 가능하게 해 준 것에 대한 보은으로 권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였고, 권 대법관은 선임대법관으로 무죄판결이 나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였

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을까. 상상조차 어려운 사실이 밝혀진 것만으로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으니 의심이 더 굳어지게 된다.

물론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자료를 임의제출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이어서 압수수색영장을 2회나 청구하고 권 전 대법관의 계좌추적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권 대법관이 이미 퇴임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를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 전 대법관이 혼자 판결한 것인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법원장이 수사협조를 하겠다고 하고 양승태前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발부한 법원의 그 용기는 어디로 갔는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재판거래’ 의혹 사건은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하나. 법원이 침묵하고 검찰 수사도 막고 있으니 의혹은 이재명 후보 사건의 일주일 전에 대법원에서 선고

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이번 대선에서 지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갈 것 같다.”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기도 하여 더욱 혼란스럽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판사들에 대해 징계가 진행되자 편향적인 인사를 계속하는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이 오히려 징계대상이라는 말까지 전해지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서 시장 4년 임기를 몇 개월 앞두고 이제 겨우 1심 재판 중에 있는 등 법원의 국민신뢰는 사라지고 비아냥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도 ‘재판거래’ 의혹은 끝내 뭉개고 갈 것인가. 이제는 국민이 ‘특검’이 아니라 ‘특판’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권력이 무너진 후 후회하기 보다는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솔직히 ‘재판거래’ 의혹을 조사하였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짓 해명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이다.

판례를 읽으며 다시 한번 ‘예쁘다’고 소리치고 싶은 시절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출처/법률신문)